

弘報室 : (02)
 6050-3602~6

* 이 자료는 **2/10(木)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2/10(木) 06:00부터**

※ 문의 : SGI 선병수 과장(02-6050-3133, 010-3364-7705)

최근 10년간 제조업 일자리 순증가율 둔화 .. 비수도권 특히 심해

- 대한상의 SGI, 10일 보고서 발표 ... 일자리 순증가율 둔화 장기화 조짐
- 비수도권의 ‘마이너스’ 순증가 현상 심화되며 ... 일자리 역동성 위축 우려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창업 활성화 통한 지역활력 제고’ 등 강조

전국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2016년 이후로 하락하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멸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10일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이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차(-)인 순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률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으로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 비율을 말하며, 소멸률은 사업 축소나 폐업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비율을 말한다. 본 연구는 SGI가 김민정 충남대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 제조업,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고용시장 악화가 장기화

보고서는 제조업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2010~2019년 동안 하락 추세를 나타낸 가운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고용 부진이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일자리 창출 하락폭이 최근 확대되며 순증가율이 2019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비수도권의 경우 2016년~2018년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순증가율($\Delta 0.4\%$, $\Delta 0.6\%$, $\Delta 0.1\%$)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시장 악화가 수도권과 비교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하락하며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수도권에서 사업체 진입, 퇴출, 성장, 축소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제조업 일자리 순증가율(%)>



<제조업 일자리 창출률·소멸률(%)>



김민정 충남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창업 인프라가 수도권과 비교해 열악하기 때문에 창업이 저조하고, 일자리 창출률 또한 수도권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서비스업,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일자리 역동성 높고 .. 2016년 이후 창출률 둔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은 수준이고,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2019년까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평균 순증가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9%, 3.0%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조업의 1.9%(수도권), 2.0%(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합(+)인 ‘일자리 재배치율’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45.6%, 비수도권은 평균 42.1%를 각각 나타내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일자리 역동성 또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6년 이후 둔화되었는데, 이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률이 둔화된 기간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시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서비스업 일자리 순증가율(%)>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률·소멸률(%)>



- SGI 제언 .. FDI 유치 및 제조업 리쇼어링 드라이브,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

SGI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①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강화 ②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및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 ③초광역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원을 제언했다.

SGI는 첫째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와 고기술 기업의 국내 유턴 유인책 강화를 주문했다. 우선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안전성 강화 및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Re-shoring(리쇼어링)이 확산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이외의 다양한 생산거점을 모색하는 이른바 ‘China+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GVC 재편에 대응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등 글로벌 투자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핵심 강소기업과 R&D 인력에 대한 종합 지원 패키지(세제, 비자 혜택 등)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한편, 권역별 FDI 전담 조직을 통해 중앙정부·지자체 등에 산재한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제언했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특화 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조세, 보조금, 인력지원

등의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데, 지역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지원으로 고기술 기업의 리턴 유인을 높이자는 것이다.

둘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지식기반 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주문하면서, 이를 위해 “지역과 지역 내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GI는 소셜벤처 육성 프로젝트인 로컬라이즈 군산이 제조업 쇠퇴로 수년간 침체되었던 군산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고부가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및 지역 혁신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청년층 인재 유입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광역 협력사업¹⁾ 확대를 통한 권역별 성장 거점 구축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제언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은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초광역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 협력과 함께 권역별 산업 구조 특징을 고려한 성공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도권에서는 기업 성장 경로와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 금년 1월 국회 통과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연구 개요>

- 배경 : 사업체 수준의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소멸 분석
- 분석 방법 : 2010~2019년 전국사업체조사*를 패널데이터로 구축
 - * 전국사업체조사 개요(최근 조사 시기 : 2020. 6월/ 기준 시점 : 2019년말)
 - 조사대상 :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개인 농·림·어가, 군부대, 노점상, 국제·외국기관,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 조사항목 : 사업체 개요(대표자, 소재지 등),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 대상샘플 수 : (제조업) 수도권 1,971,348개 / 비수도권 1,924,504개
(서비스업) 수도권 15,986,219개 / 비수도권 18,065,942개